

이재명 “檢 조작·왜곡에 굴하지 않겠다…반드시 승리”

“모략과 날조에도 국민·역사는 반드시 승리”

“대통령실, 당권싸움 손 떼고 민생 주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쫓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

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의 ‘내 맘대로 범죄’로 보인다. 이라자고 말쑥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하고 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尹대통령 “北도발, 심각한 위협

남북정상회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체 왜 그런 도발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1일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커지는 핵을 육망과 도발은 더 심각한 갈등을 촉발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보다 긴밀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리나라 다른 국가로서는 북

한이 왜 그런 도발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런 위협적인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안보 대응 능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략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소위 공동기획 및 실행(joint planning and execution)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과 미국 둘 다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으로 이용됐을 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단순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모든 통신 채널을 차단한 데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놓인 흰 전화기를 가리키며 “북한은 이 통신을 막아버리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유나기자

민주, 與 임시회 협력 촉구…“비정상 바로잡아야”

지방대 육성·공공기관 이전·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준비 철저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정상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했다. 여당 측 방탄 국회 주장엔 “실정, 폭주를 가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11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안보, 민생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 요청 드린다.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위기 등 국가 현황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도 요구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본회의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라도 조속히 열어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라”고 했다.

그는 “역대 이토록 한가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은 없었다”며 “무한책임져야 할 여당이 민생경제 상황뿐 아니라 안보위기까지 못 본 척 하면서 국회 문을 잠근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 실패를 초래하고도 사과, 문책, 대책도 없다”며 “거짓말로 진실을 덮고 대통령 이 나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여당은 해묵은 색깔론으로 몰타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에만 계류 법안이 수백 건”이라며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하는데, 방탄 국회만 억지만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보 참사에 국민 불안이 높고 복합 경제위기에 경제와 민생은 경고등이 깜빡이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 핑계를 대며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안보 참사,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요구를 묵살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발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다면서 야당 탓하던 정부여당이 정작 법안 심의를 위한 1월 국회를 틀어막고 있다”며 “누가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윤석열 참사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가리려 국민 부여 의무를 해태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